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13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년 9월 29일

나. 제 안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9월 30일

라. 상정일자: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10.1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박인수)

□ 제안이유

군부대 개편 및 서울시 조례 개정(2021. 7. 20.)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군 제5531부대장’ 을 ‘육군 제7688부대장’ 으로 명칭 변경, ‘국군
기무부대의 장’ 을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으로
명칭 변경 및 ‘1대대장’ 과 ‘2대대장’ 을 ‘4대대장’ 으로 통합
(안 제3조)

- 나. 영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방식을 정비함(안 제8조)
- 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함(안 제8조의2조)
- 라. 법 제14조, 제16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9조)
- 마. 통합방위지원본부(안 제9조)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안 제10조) 관련 규정의 항목을 통합하고 재정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18조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나. 예산조치: 2022년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예산편성 필요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8. 13. ~ 9. 2.): 의견없음
- 2)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¹⁾

- 제3조 제5항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1) 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도 동일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을 따라 조례안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함.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개정 취지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의 52사단 군부대 개편에 따라 부대 명칭 및 부대원 직책을 명확히 하고, 2021. 7. 20.자 「서울특별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안 제3조에서는
 - 52사단 군부대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 ‘육군 제5531부대’ 명칭을 ‘육군 제7688부대’로 변경하고
 - ‘1대대장’ 및 ‘2대대장’을 ‘4대대장’으로 통합하며
 - ‘국군기무부대의 장’ 직책을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 군사안보 지원대장’으로 변경하고,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8조에서는
 -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 방식을 원칙은 대면회의, 필요시 화상회의로 정하고,
 -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조문을 신설함.

○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시기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및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로 구체화 하고,
- 종합상황실 관련 규정의 항목을 통합하고 재정비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군부대 개편 및 서울시 조례 개정(2021. 7. 20.)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회의 방식,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⑥ 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⑦ 법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11. 17.>]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11.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 11. 17.>]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회의참석 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